

2010년 복지서비스정책의 변화와 전망

Welfare Service Policies in 2010: Its Issues and Prospects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밀레니엄 10년 경과 시점인 2010년은 새롭게 부상하는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공고화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 틀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다면, 지금부터는 내용을 충실화하는데 힘을 써야할 시기인 것이다. 가족해체, 다문화가족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라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여, 2010년도 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공급강화 및 사회복지 일자리 확대, 다문화가족의 기능향상, 아동청소년 방과후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보장과 전달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베이뮴 세대의 은퇴에 직면하여 신노년층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연금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장기요양보호제도는 선진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전달체계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실시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반이 다져져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밀레니엄 10년 경과 시점인 2010년은 새롭게 부상하는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공고화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의 고도화로 이제는 성장과 함께 사회적 욕구, 즉 배분을 더욱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 틀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다면, 지금부터는 내용을 충실화하는데 힘을 써야할 시기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별로 적정 국가복지수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복지서비스

제공시 이용자 중심(client centered)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복지에서 누락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상자의 복지욕구를 정확히 진단하며, 대상자에게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체계 모형을 재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복지서비스 분야의 2010년도에 예상되는 환경변화와 예산을 영역별로 살펴본 후, 정책과제로 수행해야 할 점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¹⁾

2. 2010년 복지서비스정책 관련 환경 변화양상

2010년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선진화의 문턱에 한층 다가서는 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측한다. 특히 대인 서비스를 의미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이 예견되는 한 해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복지환경의 변화에서부터 그 조짐을 엿볼 수 있다.

1)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와 다문화가족 증가

가족복지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가족의 기능 약화가 201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가족부양가치관 및 가족환경이 변화하면서 가족해체로 인해서 재생산기능의 약화와 돌봄기능의 공백 등 신사회적 위험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서 노인, 아동 등 가족의 보호가 필요한 연령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강화가 기대된다. 정부의 다양한 탈빈곤 및 갈등해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빈곤가족과 위기가족이 증가하는 원인은 위기가족의 생활 및 심리적 위기관리체계가 미흡하고 맞춤형·예방형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한편, 세계화, 혼인성비의 격차, 만혼 비혼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추세가 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100만명이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10% 이상이

될 정도로 보편화 되어 가고 있다. 농촌의 경우 결혼 4쌍 중 1쌍은 국제결혼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8). 외국인 근로자는 2008년 현재 44만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며(노동부, 2008), 이는 2005년 10만명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약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제3세계에 머물고 있는 주민도 일부는 궁극적으로 한국에 정주할 가능성이 크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등은 한국사회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다수 다문화가족은 언어·문화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간 갈등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은 학교 중퇴율이 높고, 상급학교 진학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²⁾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고, 돌봄의 사회화 기능도 강화되어 저출산 시대의 부족한 여성인력의 공백이 채워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등이 사회에 어려움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2) 사회서비스 분야의 수요증가

사회서비스란 광의로는 공공행정, 국방, 의료서비스, 교육,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고, 협의로는 사회적 보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장애,

1) 본 고에서는 보육분야의 변화와 전망은 제외하였다.

2) 다문화가족 아동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질병,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에는 교육, 의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돌봄서비스(보육, 노인수발, 장애인 지원), 주거 등의 분야가 포함될 수 있다.³⁾ 사회서비스의 도입은 복지에서는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이상에 가장 적합한 제도가 되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로 인해서 경제활동인구가 지원되며, 인적자원이 개발되며, (빈곤)예방적 의미가 가장 큰 영역이다.⁴⁾

최근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여성경제활동 참가 증가 등으로 간병, 보육, 가사지원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노인, 아동,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활상의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증진시키고자 사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왔다. 이를 통해 복지정책면에서는 한국형 복지제도가 정착화되고, 다른 측면에서는 고용이 창출되고 인적 및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초기 투입 비용은 많이 소요되지만,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⁵⁾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지출구성, 공공부문 고용규모 등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미미한 실정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는데 비해서 재정, 조직, 인력 등 관련 인

프라 구축도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⁶⁾ 2010년에는 이러한 측면의 제도적 보완이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아동청소년의 보호기능 약화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복지제도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담보하기에는 복지서비스 안전망이 촘촘하지 않다. 고위험이나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의 발견에서 적절한 보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하여, 전문적인 아동청소년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최근 가족규모 축소,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간 유대 약화,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단절 등으로 인한 가족내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구나 학력제일의 풍토 속에서 가족이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취약 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현 제도로는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사회에서 모두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 사정, 가족지원 등과 같은 유기적인 지원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보호 및 사례관리제도를 통해서 복지망이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스타트 사업을 통해서 통합적인 지원을 아동청소년과 가족

3) 김영순(2006), 「복지체제 유형과 사회서비스의 발전」, 빈곤포럼 발표자료.

4) 전게서.

5) 전게서.

6) 안성훈(2007), 「복지국가의 유형과 한국형 사회서비스 국가 기획예산처 과제를 위한 몇 가지 생각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 발표자료.

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때, 다양한 전문가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시스템도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공공이 중심축이 되어 허브기관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위기 아동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고 있다.

사례관리제도에 대한 심층 고찰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어야 할 제도 뿐 아니라 인력의 전문성, 기관 간 역할 분장을 위한 법적 장치 등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모든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4)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추세가 2010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 일자리 창출 및 사전예방적 투자 등을 통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시스템 마련 및 전달체계의 정비 등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초장애연금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장애인복지분야에 괄목할만한 성장이 예견된다. 아울러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등 새로운 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추진되고 있고, 수요자 중심 및 효율적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장애판정, 서비스욕구 평가 및 사례관리 시스템 개편)사업도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진행 중에 있어 이러한 사업이 내년에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 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와 신고령자층 사회참여 독려

노인의 생활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8년 1월부터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2008년 7월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노후생활의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9년부터 소득인정액 하위 60%에서 70%로 확대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9년 9월 현재 노인인구의 5.3%인 27.6만명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요양시설이 2,385개, 재가시설이 16,660개 설치되어 있다⁷⁾. 이외에도 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 외의 노인들과 독거노인들에게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노인돌봄미 바우처 사업 등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2008년 9월에 수립된 치매종합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한편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9년 10월말 현재 976개의 사업수행기관에서 195,811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⁸⁾ 2013년까지 34만개로 확대해갈 계획으로 있다⁹⁾.

7) 복지부 내부 자료

8) 복지부 내부 자료

9) 신영석 외(2009), 『제3차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조직화를 통하여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영위케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

2010년에는 노인수 증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자가 확대되고(363명에서 371만명으로) 지급액도 최대 8만8천원에서 9만1천원(국민연금가입장 월평균소득월액(A값)의 5%)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대상자의 증가로 인하여 예산이 증가하였고, 노인종합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은 10,140명에서 26,74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09년도 현재 20개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은 3개소가 확충될 예정이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확충관련 예산은 시설종족을 제고에 따라 감소하였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도 목표 일자리 수가 감소함에 따라 예산이 감소하였다¹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노인의 기본적인 소득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성공적으로 도입· 정착되었지만 향후 이러한 제도의 내실화와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6) 사회복지 전달체계 문제 개선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여러 번의 개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해결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공공 복지수행체계의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¹⁾ 첫째,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기초보장 중심의 업무가 우선되고, 서비스 관련 욕구파악과 서비스 연계가 미흡하다. 둘째, 대상자별, 서비스간, 공공 민간기관 간 협력기반으로서의 전산시스템이 미비하다. 셋째, 시군구 단위의 사업기획의 필요성은 높아가나, 재정력·기획경험의 부재로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넷째, 복지업무에 대한 읍면동 주민생활담당(6급)의 역할이 취약하다. 마지막으로 유관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협력업무가 취약한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고용지원기관, 보건소, 민간복지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¹²⁾

3. 2010년 복지서비스 예산과 정책 전망

1) 복지서비스 예산

2010년 복지서비스 분야의 예산은 2009년에 비해서 16.1% 증가한 7.1조원으로 확정되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노인복지분야로 3.4조가 배정되었고, 그 다음은 보육

10)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 『201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11) 강해규·이현주·최근 외(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전게서.

분야로 2.1조가 책정되었다. 그 다음은 사회서비스 6.5천억원, 장애인복지 6.5천억원의 순이었고, 아동청소년은 1.6천억원, 가족은 1.5천억원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2009

년에 비해서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사회서비스 분야로 41.8%가 증가하였고, 그 다음은 가족분야로 32.6%가 증액되었다. 반면 아동청소년 분야는 16.2%의 예산 감소를 보이고

표 1. 복지서비스 예산 (2009~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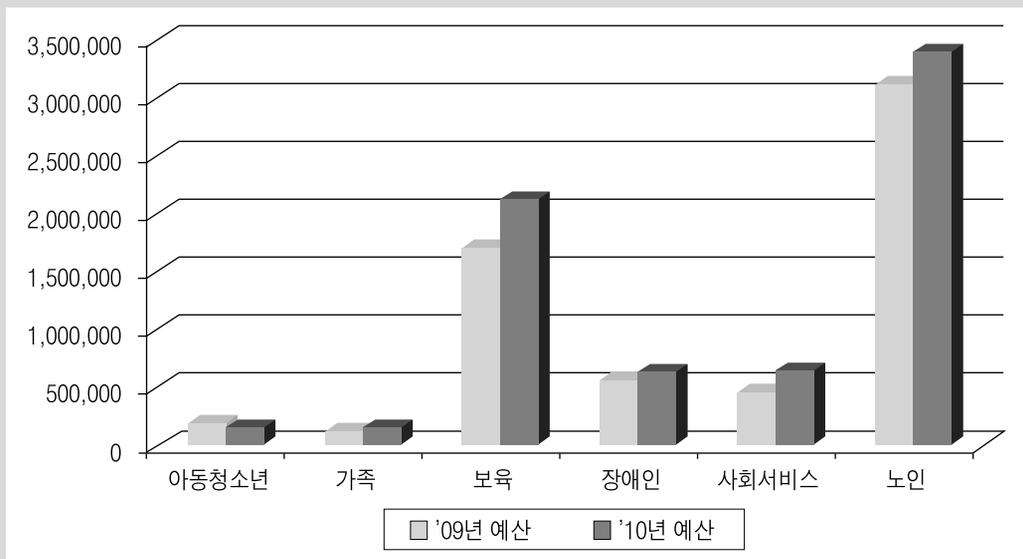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사회복지 부문	'09예산 (A)	'10예산 (B)	증감 (B-A)
총 계	6,155,260	7,143,769	988,509(16.1)
아동·청소년	193,279	161,895	△31,384(16.2)
가족	113,934	150,961	37,027(32.5)
보육	1,710,430	2,127,509	417,079(24.4)
장애인	556,539	647,540	91,001(16.4)
사회서비스	459,799	651,908	192,109(41.8)
노인	3,121,279	3,403,956	282,677(9.1)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 『201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그림 1. 복지서비스 예산 (2009~2010년)

(단위: 백만원, %)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 『201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있다. 아동청소년 분야의 경우 아동시설지원, 아동청소년 정책 예산이 줄어들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2) 사회서비스 공급강화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향후에는 복지서비스 어느 분야보다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급확대가 예견되고 이 분야의 일자리도 확충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5년간은 사회서비스 제도의 정착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점검, 제도 시행에 따른 수행 기반의 재편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돌봄·보육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 영역의 바우처제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정비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육성법, 사회서비스벤처기업 육성·지원 등 새로운 비영리 및 영리 사회서비스 사업자 창출을 통한 공급체계 개편이 요구된다.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국가최저기준, 적정기준을 도출하고, 서비스 제도를 통합적 공급체계로 정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만들어야 하며, 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궁극적으로는 복지와 고용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일자리가 창출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한다.

지방이양된 사회서비스 사업 수행 실태 분석

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재정 및 사무분담의 중앙-지방정부간 역할분담 방안이 구축하도록 한다. 지자체별, 사회서비스 사업유형별로 적합한 중앙, 지방정부의 재정방식을 검토하고,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다문화가족의 기능강화 및 사회통합 촉진¹³⁾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통합을 위하여 결혼이민자, 배우자, 자녀 및 부모 등 모든 가족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해야 한다. 특히 농산어촌의 경우 프로그램 대상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차량지원 및 방문지도교육 프로그램 등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가족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으나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별 취·창업 계획을 세우도록 하며 지역사회별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양질의 다문화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교재와 프로그램 메뉴얼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국적, 거주지역, 교육수준 및 학습능력별로 차별화한 수업이

13) 이 부분은 김미숙·김유경·이주연·양현화(2009), 『지역사회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인프라 현황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부를 요약발췌한 것이다.

가능하도록 교재가 제작되어야 한다. 나아가서는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에 결혼이민자 관련 교육 및 정보를 총괄할 수 있는 정책조율 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행 노정되고 있는 서비스의 중복을 피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될 것이다.

4) 드림스타트 확충 및 방과후 서비스 내실화

지금까지 아동·청소년 분야는 복지서비스 분야 중에서 가장 취약하게 다루어져왔던 분야이다. 예산면에서도 2010년 예산은 1,600억원으로 3.4조에 달하는 노인복지예산의 21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미래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미비할 때 우리 사회의 앞날도 밝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속에서 취약 및 위기계층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상별 집중지원체제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분야의 예산은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특히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돌봄이 확대되고 사교육비가 절감되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체제로 정부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목적은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빈곤아동 및 그 가족에게 제공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총 75개소의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이 지

정되어 있는데, 이를 올해는 11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2013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1개소씩 총 250개 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 및 가족에게 다양한 효과성이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질적인 정교화를 통해서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 방과후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현재 노정되고 있는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지역자원 동원의 어려움, 운영위원회 기능의 유명무실성 등을 감안하여 서비스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178개소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증설을 통해서 청소년의 방과후 사업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5) 장애인 소득보장과 전달체계 개편

활동보조서비스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UN장애인권리협약가입 등을 통해 당사자 권리에 기반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장애범주확대로 장애인구가 증가하고,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장애인 복지분야는 그동안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혜적·공급자적 관점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와서, 제도의 효율성과 복지체감도는 낮은 문제를 안고 있다. 즉, 복지의 틀은 갖추었으나, 수요자 중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소득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수당(연금) 지급율을 2006년 16.4%에서 연차적으로 제고하여 2013년에는 29.8%까지 이르도록 한다.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종류와 대상을 확대하도록 한다. 특히 요양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한다.

아울러 전달체계개편이 시급하다. 전달체계에는 사례관리 체계화, 장애판정체계 구축, 장애인 거주서비스 체계 일원화 및 시설 소규모화,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도입 및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 등 미충족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이 제고되도록 해야 한다.

6)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및 재구조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액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가입자 월평균소득월액의 10%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언제 어떻게 급여액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실정이므로 구체적인 급여액의 인상방안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이 지방재정에 가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고,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관리체계도 보건복지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관리운영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 과제의 해결

방안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및 재구조화 방안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를 논의의 통한 장기적인 발전 방안 모색이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장기요양보호체계의 선진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졌으므로 제도 시행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장기요양보호체계의 선진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요양보호사가 과다배출되어 요양보호사의 질 관리와 교육기관 설치 기준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에서는 교육기관을 현재의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인력배치 및 시설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과과정에 치매케어 내용을 추가하고 교육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교육내용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 요양보호사의 질을 통제하는 맥락에서 요양보호사 시험제 도입이 모색되고 있다.

한편 재가기관의 수준 향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정부는 난립되어 있는 방문요양기관의 시설 및 기준을 대폭 강화해갈 예정이다. 정부는 설치기준을 강화(사무실 16.5㎡ → 33㎡, 요양보호사 3명 → 30명 이상)하고, 소규모 기관은 통폐합을 유도해갈 것이며 요양보호사의 30% 이상은 상근인력으로 배치하고, 요양보호사 30명 이상인 경우는 1명의 관리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가정에서 장기요양하는데 필요한 요양, 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

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 외에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가 필요한데 아직 구체적인 확대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급여내용의 확대가 요구되는데 특히 재활서비스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모형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이후 노인복지가 장기요양서비스에만 초점을 두어 다양한 서비스 간 연계가 소홀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공체계의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관련 서비스제공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8)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기회 제고

전체 인구의 14.6%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2010년에 55세로 고령자층으로 진입하는 등 대거 은퇴가 예견되므로 이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기회 제고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사회적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간병·영유아 돌보미·노인요양보호 등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 및 그와 관련된 직무교육의 실시, 민간일자리창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제공, 고령층간의 소모임 활성화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형성, 이들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의 확대 등

이 요구된다. 더불어 이들이 은퇴 이전부터 직장 및 지역 복지센터 등에서 노후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할 것이다.

9)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확충

저출산고령사회, 경제위기 등에 따라 가족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정책 등 모든 복지부문에 있어 보다 탄실한 안건망을 구축하고, 체계적이며 보편적인 정책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 기반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이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복지정보에 연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가능성이 용이하게 되며, 발급서류 및 신청서식이 축소되어 서류 처리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며, 상담정보 담당자와의 연계가 강화되어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¹⁴⁾

한번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안내, 상담 및 연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야말로 ‘통합’된 서비스를 받을 수

14) 강혜규(2009),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운영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효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2009. 1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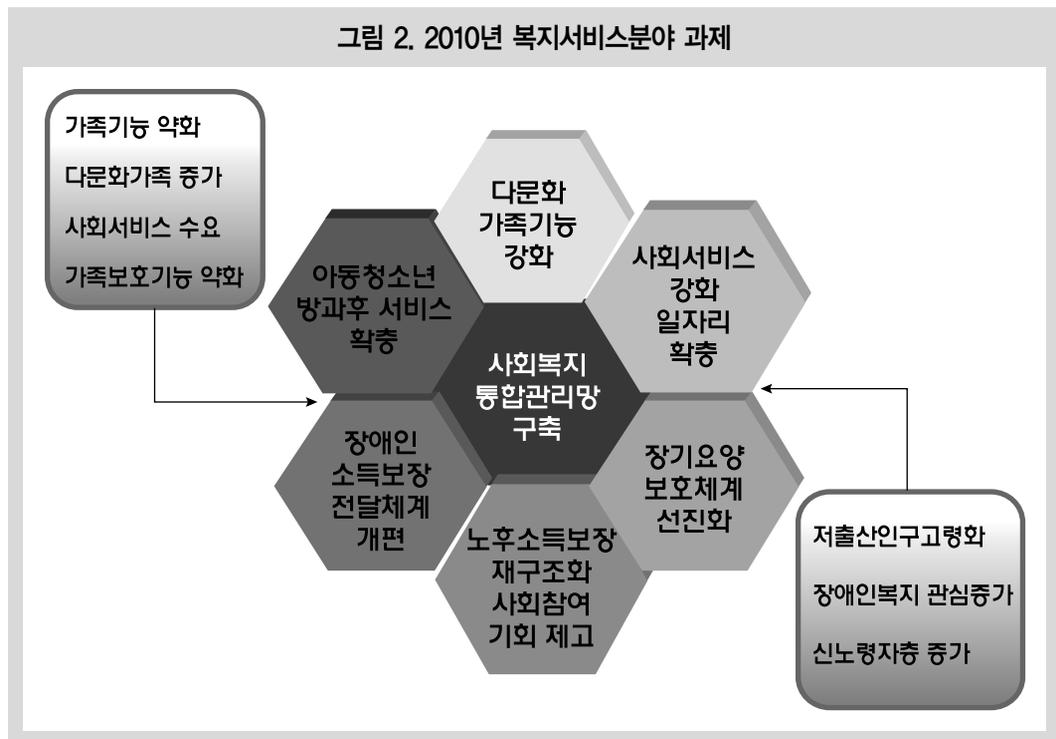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구별 실정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이 제도는 공급자에게도 편리한 시스템이 된다. 지자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약 120여개의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¹⁵⁾ 통합관리망을 통해서 정보연계를 관리하고, 장애대응, 부정·중복 모니터링, 개입정보 보호 관리, 지자체 공무원 상담문의 대응·교육, 지자체 복지사업정보화 지원, 데이터분석을 통한 정책평가 및 통계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복지행정의 측면에서도 급여 행정의 정확성, 일관성, 형평성이

향상되고 행정오류가 감소되며, 업무자동화로 편의성이 제고된다.¹⁶⁾ 올해는 통합관리망 시행 원년으로서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이 다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2010년 복지서비스 분야 과제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4. 나아가며

올해는 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복지수요가 더욱 증대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15) 전계서.

16) 전계서.

의 입장에서는 경제선진국의 위상에 걸맞는 복지선진국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그동안 선진적으로 짜여진 복지의 외형적인 틀이 이제는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수요자 중심의 복지라고 부른다. 보다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여러 단계에 걸쳐서 유기적인 복지서비스체계를 갖추되, 대상자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연속적인 체계 안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원이 다양화되어 부족한 공공자원을 보충하고 사회의 유희자원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한국형 복지서비스 모형이 개발되어,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모범적인 복지시스템을 갖춘 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주변국가가 벤치마킹하게 되는 제도가 구축될 날이 멀지 않게 될 것으로 본다. 